

성폭력 관련 보도특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선남

원광대학교 정치·행정·언론학부 교수

I. 문제의 제기

최근에 발표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전체 범죄 건수는 175만2598건으로, 2010년의 178만5376건에 비해 3만2778건(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폭력이나 절도, 폭력 등 주요 범죄는 2010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였다. 특히 강간과 강제추행 등과 같은 성폭력은 2011년에 1만9489건이 발생하여 2010년 1만8256건에 비해 1233건(6.8%)이나 증가했다(문화일보, 2012. 8. 31). 정부가 2006년부터 성폭력을 5대 폭력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내세웠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특히 아동 관련 성폭력이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2006년에는 772건이었던 것이 2008년 1,005건, 2010년 1,105건 등 발생건수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경향신문, 2009. 10. 2.).

나날이 흉악해지는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사회문제로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언론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언론은 사회의 ‘창문’ 혹은 ‘거

울’로서 뉴스를 선택하여 보도할 수 있는 기능을 갖기 때문에 그렇다. 나아가 언론은 뉴스를 단순하게 전달하는 ‘거울’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여론을 주도하고 그 이슈에 대해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현실구성체’ 역할도 수행한다(McQuail, 1987/1990). 즉, 수용자는 언론에 의지하여 특정이슈에 대한 사실적인 내용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특정한 입장을 갖게 된다.

실제로 언론은 성폭력 이슈를 집중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정부의 법적 및 제도적 장치 마련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예를 들면, <김부남> 사건에 대한 보도는 아동 성폭력이 얼마나 일상적으로 발생하는가를, <김보은> 사건에 대한 보도는 근친에 의한 성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 등을 알림으로써, 성폭력을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시켰다(문경란, 1994, 37~38쪽). 최근 들어 <조두순>, <김길태> 사건 등에 대한 보도는 정부로 하여금 흉악법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는데 기여하였다(동아일보, 2010. 4. 17.).

언론이 이와 같은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의 보도방식과 태도로 인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먼저,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일명 ‘떼거리 저널리즘’ 혹은 ‘멤비 저널리즘’ 속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기자협회(2012. 9. 19.)에 의하면, 아동 성폭력의 심각성이 대두되기 전에는 아동 성폭력 관련 보도 건수(2007년)가 1년에 불과 100건~200건에 지나지 않았었다고 한다. 하지만 <김길태> 사건 이후(2009년)에 그 양이 10배나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특정한 기간에 성폭력 이슈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사건 지향적인 특성과 무관치 않다. 다시 말해,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경찰발표, 즉 사실(fact)을 토대로 스트레이트기사로 처리하기 때문에 많은 건수를 다룸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원인을 분석하거나 파급효과, 대책 등을 심층적으로 다룰 수 없다. 이러한 보도 특성은 성폭력 사건을 가해자와 피해자 중심의 단순사건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 즉, 성폭력 사건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중대범죄가 아니라 단순한 사건으로 탈색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이러한 보도 특성은 피상적 보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연구자들(문경란, 1994; 유선영, 1999)은 기존의 성폭력 관련 보도가 심층적인 보도보다는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치중하여 성폭력 이슈를 단순사건으로 축소하여 왔다고 비판한 바 있다.

둘째, 성폭력 보도는 선정주의적 보도관행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정용국, 2012, 24쪽). 특히 선정적인 제목을 달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담아냄으로써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김훈순, 2004; 김덕모, 2006).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기사표제로는 <악마들의 소굴마다 아동포르노 있었다>(국민일보, 2012. 9. 3.), <잔혹 여고생 남학생 앞에서 친구 성 학대... 사진 찍어 돌려봐>(동아일보, 2005. 4. 22.) 등이 있다.

이러한 선정적인 기사들은 성폭력 행위만을 묘사함

으로써 성폭력의 심각성을 희석시키고 성폭력을 사건 지향적인 이슈로 만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장하경주, 2006, 126~127쪽). 언론보도가 성폭력 사건을 흥밋거리로 변질시킨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와 무관치 않다(김덕모, 2006). 성범죄 보도의 선정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이유는 대중의 주목과 관심을 끄는 데만 치중하느라고 사안의 본질이나 핵심내용과는 무관한 지엽적인 부분을 확대하거나 과장하기 때문이다(정용국, 2012, 25쪽).

셋째, 성폭력 관련 보도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보도의 신중성이 요구되지만 이를 간과한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일부 언론이 피해 아동의 일기장을 공개하고,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신중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매체간의 독자경쟁에서 비롯된 선정적인 보도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보도 경쟁은 오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언론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조선일보가 성폭력사건을 보도할 때 피의자가 아닌 엉뚱한 시민의 사진을 올려서 물의를 일으킨 것도 바로 선정성 경쟁과 신중성 결여에서 야기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기자협회, 2012. 9. 19.).

성폭력 관련 보도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문제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보도쟁점 혹은 보도특성을 규명하는데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다. 물론 이러한 연구들은 성폭력 관련 보도의 일반적인 경향을 규명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보도의 문제점을 조명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제시하는데에는 미흡하였다(하종대, 1999; 김덕모, 2006; 김선남·장해순,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연구를 토대로 성폭력 보도의 특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II. 기존문헌의 검토

지난 5년간 우리 사회는 무려 9만 여건의 성폭력사건을 기록하였다. 이는 하루 평균 52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로 엄청난 수치이다. 이를 인구비례로 살펴보면, 563명당 1명(0.18%)이 성폭력에 의해 희생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성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여 425명 중 1명(0.23%)이 피해를 당하였다. 그 뒤를 이어 광주 0.22%, 제주 0.2%, 부산 0.2% 등의 순서였다. 또한 성폭력 사건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1만5970건이었던 것이 2011년 2만1912건으로 37%나 증가하였다. 특히 13~20세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2007년 3783명에서 2011년 6844명, 5년 동안 약 80%나 증가)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뉴시스, 2012. 10. 17.).

성폭력은 일상적이고 계획적이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2011)에 따르면, 성폭력 가운데 85.1%(980건)가 ‘아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성폭력 범죄가 일부 일탈 행위자에 의한 범죄가 아니라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폭력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성폭력 내용을 살펴보면, 성인여성(228건, 32.4%)의 경우는 직장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이 가장 많았던 반면, 유아(26건, 44.1%) 및 어린이(69건, 53.5%)의 경우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이 많았다. 이 사실을 통해서 성폭력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일상공간이나 생활공간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성폭력은 다른 범죄와 달리 우발적, 일회적 범죄가 아니라 일상적, 습관적 범죄인 것이다(유선영, 1999, 98쪽).

성폭력은 숨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희생자의

수가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유엔의 자료(한겨레, 2012. 8. 17.)는 한국에서 발생한 성폭력 건수를 2009년 현재 여성인구 10만 명당 33.7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낮은 성폭력 신고율(7~10% 안팎)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건수는 유엔 통계보다 약 8배 높은 467.7명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성폭력 사건이 증가하면서 언론들도 이를 더 많이 보도하고 있다. 특히 ‘범죄’와 ‘여성’은 뉴스 가치(news value)가 높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최근 동종 및 이종매체간의 뉴스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범죄, 부패, 사고, 재해, 성, 인간적 흥미 등과 같은 연성뉴스(soft news)의 양이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김예란(2003, 17쪽)은 최근에 나타나는 언론의 특성을 “타블로이드화, 대중저널리즘화, 기사의 연성화”라고 규정한 바 있다. 또 한국인이 선호하고 주목하는 지면이 사회면이라는 특성(황용석, 1999; 조수선, 2004)을 고려한다면, 성폭력을 비롯한 성범죄는 언론보도의 주요 소재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성폭력 관련 보도는 여론형성의 기능, 사회적 통합의 기능이라는 순기능을 갖고 있지만 잘못 전달될 경우 여러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 정용국(2012)은 성폭력 보도의 역기능으로 ‘범죄의 성애화’, ‘2차 피해의 확산’, ‘왜곡된 성관념의 양산’, ‘실효성 없는 대책남발’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언론이 단순히 범죄결과나 범죄행위 그 자체에만 치중하게 되면 범죄의 배후에 존재하는 사회구조적 문제점을 은폐시켜 이를 사회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이진국, 2004, 40쪽). 이런 현상은 특히 성폭력 관련 보도가 피상적인 태도를 취할 때 나타날 수 있다(김선남·장해순, 2011; 유선영, 1999; 문경란, 1994).

뿐만 아니라 선정적인 기사는 수용자들에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모방범죄를 생산

할 가능성을 높여 준다(이진국, 2004, 50쪽). 또한 성폭력 관련 보도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항들을 언급해야 하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승선(2012, 28쪽)은 “섬세하고 엄밀한 취재가 없다면 차라리 성범죄 관련 보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제안하면서, 성폭력 보도가 인권보호에 초점을 둘 것을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성폭력 보도가 선정적으로 흐르게 되면 성 고정관념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성에 관한 잘못된 믿음을 재생산할 가능성이 있다(김덕모, 2006; 유선영, 1999 등). 다시 말해, 언론의 선정적이고 흥미 위주의 보도성향이 결과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김훈순, 2004; 김덕모, 2006; 하중대, 1999).

장하경주(2006)는 이러한 성폭력 보도의 역기능, 특히 선정성 및 피상성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주장을 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성폭력 기사는 대부분의 경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표제를 사용하여 성폭력을 흥미 위주의 가십거리로 규정한다고 한다. <부자가 자취여중생 성폭력 인륜 파괴>(한겨레, 1996. 7. 9.), <이번엔 여교교장이...>(한겨레, 1996. 7. 12.), <성폭행 여중생 또 출산>(조선일보, 1996. 7. 31.), <성폭행 당한 10대 자살/3-4명에 납치...“살기 싫다”유서>(조선일보, 1996. 7. 24.), <소녀 번갈아 성폭행/10대 2명 검거>(동아일보, 1996. 7. 10.), <낮에 학생 밤엔 조직폭력/무서운 고교생들>(동아일보, 1996. 7. 9.) 등이 이에 해당하는 예이다. 또한 그는 성폭력 보도는 사건을 심층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단신으로 처리하여 사건의 심각성을 희석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역기능은 성폭력 보도가 사실전달에 급급하기 때문에 발생한 당연한 결과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언론의 접근방식의 전환을 촉구하였다. 즉, 언론보도는 사실전달에 머물지 말고 배경 및 문제점 등을 심도 있게 다루어서 사회적 대책을 마련하는데 일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2006, 128~129쪽).

한편, 김덕모(2006, 96~100쪽)는 성폭력 보도를 인권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8가지 보도 유형 때문에 역기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 (1)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 성범죄를 묘사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심어주고 피해자를 선정적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보도
- (2) 성폭력 규정을 회피하거나 가해자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보도
- (3) 피해자의 주체성을 왜곡하는 보도
- (4) 선정적 묘사와 피해자 고통을 외면한 흥미 위주 보도
- (5) 본말 전도에 의한 왜곡보도
- (6) 사건의 원인을 사회분위기나 피해 여성에 등을 돌리는 듯한 보도
- (7) 언론보도에 의한 신원노출과 프라이버시 침해 보도
- (8) 인권문제인 성폭력 문제를 성윤리와 도덕문제로 다루어 본질을 왜곡하는 보도 등이다.

김덕모(2006, 100~101쪽)에 의하면, 성폭력 보도의 역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보도지침을 만드는 것은 물론 수용자의 미디어 액세스권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고 한다.

성폭력 보도와 관련된 특성을 분석한 기존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성폭력 보도는 가해자 지향적인 뉴스방식을 취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난하는 관점(victim blaming approach)에서 벗어나지 못했다(유선영, 1999). 둘째, 성폭력 보도의 상당수(전체의 55.7%)가 단순나열식 보도, 즉 사건지향적이고 폭로적인 입장을 보였다(김선남, 1996). 셋째, 성폭력 보도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보도방식의 특성을 보였다(장하경주, 2006). 기사의 표제에서 특히 이런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넷째, 성폭력 관련 보도는 여성의 순결을 부각시켜서 여성

차별 관념을 재생산하는 데 앞장섰다(김선남, 1996). 다섯째, 성폭력 보도는 사건들을 심층적으로 다루기 보다는 단신으로 처리하여 사건의 심각성을 희석시켰다(장하경주, 2006).

III.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 관련 보도의 특성은 어떠한가?

본 연구는 성폭력 관련 보도가 심층성을 결여하여 성폭력 사실을 단순하게 기술하거나 고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심층성 여부는 보도유형, 보도형태, 보도의도, 대안유형 등을 통하여 판단하였다. 뉴스유형이 스트레이트기사일수록, 보도의도가 단순한 정보제공에 머물러 있을수록, 대안제시가 부재할수록 심층성이 낮은 것으로 규정하였다.

둘째, 성폭력 관련 보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성폭력 보도와 관련된 문제점의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심층인터뷰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전문가 집단(언론계)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보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방법에 입각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내용분석방법을 활용한 이유는 이 방법이 미디어 내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수량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디어 내용의 흐름을 총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는 2개 중앙일간지 <동아일보>, <한겨레>에서 2012. 9. 1.~9. 31.까지 보도한 성폭력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¹⁾. 2개의 신문을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논조가 보수와 진보의 양 극단에 위치하고 있어서 다양한 입장을 담아낼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 기준에 입각하여 최종적으로 수집된 성폭력 관련 기사는 <동아일보> 61건(50.4%), <한겨레> 60건(49.6%)이었다.

본 연구는 성폭력 보도의 시각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유목을 설정하여 자료를 구분하였다. 첫째, 기사유형을 기준으로 성폭력 기사를 스트레이트 기사(사건·사고 기사), 해설기사(사설, 논평), 의견기사(전문가의 기고 및 투고), 인터뷰기사, 미담기사 등으로 분류하였다. 스트레이트기사일수록 심층적, 전문적이지 못한 반면, 해설·의견기사일수록 심층적, 전문적인 것으로 규정하였다.

둘째, 기사작성자를 기자, 전문가, 논설위원, 독자, 없음 등으로 구분하여 성폭력 관련 기사를 분류하였다. 기사가 기자에 의해 작성된 것일수록 심층성, 전문성이 수반되지 않았다고 본 반면, 전문가, 논설위원에 의해 작성된 기사일수록 심층성, 전문성이 수반되었다고 보았다.

셋째, 기사내용은 성폭력 사건·사고, 성폭력 관련 정책,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성폭력 관련 현황보고

1) 본 연구는 한국언론연구원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 KINDS를 이용하여 “성폭력”이라는 검색어를 이용하여 자료를 입수하였다. 그러나 이 자료 가운데 성폭력과 무관하거나 해외 관련 보도는 편의상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신문의 한 기사 내의 표제 속에 한 명 혹은 두 명 이상의 기자에 의하여 보도된 건수는 하나의 기사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해진 유목에 따라서 두 명의 코더가 각기 독립적으로 전체 자료를 분류하였다. 코더간의 신뢰도를 계산한 결과 Holsti 계수가 .92로 나타났다.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 항목은 보도의 심층성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도가 성폭력 사건·사고, 정책, 현황을 등을 단순히 기술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건의 원인과 문제제기, 대안제시 등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설정되었다.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과 관련된 기사는 심층적인 것으로 보았던 반면, 성폭력 사건·사고 및 정책, 현황 등을 기술한 기사는 피상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넷째, 보도의도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고발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얼마나 문제를 쟁점화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는가를 기준으로 유형화하였다. 일반적으로 보도의도는 단순정보, 행사 및 이벤트 공지, 성폭력과 관련된 문제의 제기(공통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이슈화), 발굴(예, 미담)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박명진, 1991). 보도의도는 기사가 단순한 정보 제공, 행사나 이벤트 공지 등에 해당하는 것일수록 피상적인 것으로, 문제제기에 해당하는 것일수록 심층적인 것으로 규정하였다.

다섯째, 성폭력 보도의 피해자를 계층별로 구분하

였다. 계층은 아동 및 청소년, 일반여성, 장애여성, 외국인여성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보도내용이 특정 계층에 치우칠수록 그 보도를 획일적인 것으로 규정하였다.

여섯째, 보도시각은 보도내용에 포함된 성폭력의 원인, 책임소재, 대안의 성격 등을 기준으로 '보수주의', '여성주의', '시각부재'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성폭력 기사의 시각이 성폭력의 원인과 책임을 여성 개인에게 돌리는 경우를 보수주의로, 법이나 제도의 개선, 개인의 의식변화, 성교육 강화, 성문화 모순 등으로 돌리는 경우를 여성주의로 분류하였다. 한편 기사내용이 성폭력의 원인, 책임소재, 대안 등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사실만을 단순히 기술하고 있으면 '시각부재'로 분류하였다.

3. 심층인터뷰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는 성폭력 관련 보도의 문제점과 원인을 살피기 위하여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가

〈표 1〉 심층인터뷰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순서	성별	나이	학력	지역
1	남	45	대졸	서울
2	남	37	대졸	전북
3	남	56	대학원졸	전북
4	여	30	대졸	전북
5	남	43	대졸	서울
6	여	42	대졸	전북
7	남	59	대학원졸	전북
8	남	41	대졸	서울
9	여	40	대졸	서울
10	여	40	대졸	서울
11	남	52	대학원졸	서울
12	남	44	대졸	서울
13	여	41	대졸	서울
14	남	41	대졸	전북
15	남	50	대학원졸	전북
16	여	51	대학원졸	전북
17	남	44	대학원졸	서울
18	여	32	대졸	서울
19	여	29	대졸	전북
20	여	31	대졸	전북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한 이유는 이 방법이 갖는 장점 때문이었다. 패튼(Patton, 2002)에 의하면, 심층인터뷰는 사람들의 경험, 인식, 지식 등에 대한 심층적 반응을 얻어내는데 유용한 방법이다(김선남·최용준·이영원, 2007, 31쪽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 심층인터뷰는 언론종사자 2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 55%, 여자 45%, 지역별로는 서울 50%, 전북 50%, 연령별로는 20~30대 25%, 40대 50%, 50대 25% 등으로 구성되었다(〈표 1〉 참조). 일부 인터뷰는 연구자가 대상자를 직접 만나 30분가량 면담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나머지는 연구자가 이메일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전달하고, 응답된 설문지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인터뷰는 성폭력 보도의 현황 및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주관식으로 묻고 답하게 하는 절차로 구성되었다. 인터뷰는 2012. 11. 8. ~ 11. 15. 까지 일주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심층인터뷰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IV. 연구결과

1. 분석 결과 : 성폭력 보도의 특성

성폭력 관련 보도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보도유형, 보도작성자, 보도의도, 보도시각 등을 살펴보았다.

가. 스트레이트성 기사에 의존하는 성폭력 보도: 피상적 보도

성폭력 관련 보도 가운데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것은 스트레이트기사(62.0%)였다. 즉, 사건·사고 등과 같은 표면적인 현상만을 보도하는데 치중하였다. 반면 심층적 보도(해설기사, 의견기사)는 25.0%에 불과하였다. 이 결과를 통하여 우리는 성폭력 관련 보도는 대체로 사건사고의 고발 등 이슈의 표면적인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성폭력 현상의 원인이나 대안 등을 심층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간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상적 접근을 하는 기사들은 신문사별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지만(동아일보와 한겨레는 각각 62.3%, 61.7%), 동아일보는 해설기사(16.4%), 즉 사설이나 논평 등으로, 한겨레는 의견기사(15.0%), 즉 전문가의 기고 및 투고 등으로 피상성의 보완을 시도하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향후 언론은 성폭력과 관련된 보도하는데 있어서 현황보고나 기술 등에 그치는 단순한 정보제공자에서 벗어나 사회적 비판자, 감시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외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성폭력 이슈에 대한 심층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기자취재에 의존하는 성폭력 보도 : 전문성 결여

성폭력 관련 보도는 주로 기자에 의하여 작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80.2%). 전문가에 의한 보도는 15.0%

〈표 2〉 보도 유형

단위 : 건수 (%)

유형	동아일보	한겨레	계
스트레이트	38 (62.3)	37 (61.7)	75 (62.0)
해설	10 (16.4)	7 (11.7)	17 (14.0)
의견	4 (6.6)	9 (15.0)	13 (10.7)
인터뷰	8 (13.1)	7 (11.7)	15 (12.4)
미답	1 (1.6)	0 (0.0)	1 (0.8)
계	61 (50.4)	60 (49.6)	121 (100.0)

미만에 불과하였다(관련 외부 전문가, 9.1%, 논설위원, 5.0%). 누가 기사를 작성했는지조차 밝히지 않은 출처 미상의 보도도 4.1%나 되었다. 이들에 대한 보도의 심층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동아일보는 사내 논설위원(8.8%)의 의존도가 높았던 반면, 한겨레는 사외 전문가(10.0%)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향후 언론은 사내·외 전문가를 더 기용함으로써 성폭력 관련 주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성폭력 관련 전문가 자체의 도입 및 활용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사건·사고, 정책 및 현황 기술에 치우친 성폭력 보도 : 원인규명과 대안마련에 소홀

가장 많이 보도된 성폭력 기사는 사건·사고(46.3%)를 기술하는 것이었다.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고찰(22.3%), 성폭력 정책보고(20.7%), 현황기술(10.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대부분의 기사내용은 성폭력과 관련된 표면적인 현상을 다루었고(약 78%), 심층적인 기사는 단지 22%에 불과하였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향후 성폭력 관련 보도는 성폭력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 단순사실 제공에 매몰된 성폭력 보도 : 심층성 결여

성폭력 기사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보도의도는 단순사실 제공과 관련된 것이었다(75건, 62.0%). 그 뒤를 이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초점을 둔 기사(28건, 23.1%), 행사 및 이벤트를 고지(9건, 7.4%), 발굴 보도(9건, 7.4%) 등이 있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심층성이 다소 결여된 상태에서 성폭력 관련 기사가 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에는 문제를 제기

〈표 3〉 보도작성자

단위 : 건수 (%)

보도작성자	동아일보	한겨레	계
기자	50 (82.0)	47 (78.3)	97 (80.2)
사외 전문가	5 (8.2)	6 (10.0)	11 (9.1)
논설위원	5 (8.2)	1 (1.7)	6 (5.0)
독자	0 (0.0)	2 (3.3)	2 (1.7)
없음	1 (1.6)	4 (6.7)	5 (4.1)
계	61 (100.0)	60 (100.0)	121 (100.0)

〈표 4〉 보도내용

단위 : 건수 (%)

소재	동아일보	한겨레	계
성폭력 관련 사건 사고	29 (47.5)	27 (45.0)	56 (46.3)
성폭력 관련 정책 보고	11 (18.0)	14 (23.3)	25 (20.7)
성폭력 관련 현황 기술	8 (13.1)	5 (8.3)	13 (10.7)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고찰	13 (21.3)	14 (23.3)	27 (22.3)
계	61 (100.0)	60 (100.0)	121 (100.0)

〈표 5〉 보도의도

단위 : 건수 (%)

의도	동아일보	한겨레	계
단순한 사실 보도	38 (62.3)	37 (61.7)	75 (62.0)
행사이벤트 고지	12 (19.7)	16 (26.7)	9 (7.4)
발굴 보도	5 (8.2)	4 (5.0)	9 (7.4)
문제제기 보도	6 (9.8)	3 (6.7)	28 (23.1)
계	61 (100.0)	60 (100.0)	121 (100.0)

하는 보도가 더 많아져야 할 것이다.

마. 미성년자 이슈에 치중하는 성폭력 보도 : 획일성

성폭력 관련 보도 가운데 언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은 미성년자(아동, 10대)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었다(55.4%). 그 뒤를 이은 것이 성인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관련 기사였다(43.8%). 한편, 장애인 여성이 관련된 성폭력 사건의 보도는 1건(0.8%), 외국인 여성과 관련된 성폭력 사건의 보도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언론이 주로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폭력 사건의 보도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보도소재의 획일성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언론에서는 다양한 계층과 관련된 성폭력 소재를 발굴하여 보도할 수 있도록 소재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바. 수박 겉 핥기식 성폭력 보도 : 시각부재

상당수 성폭력 기사에서는 시각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78.5%). 또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대안을 제시한 여성주의 시각은 26건(21.5%)에 불과하였다. 다행스러운 것은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보수주의적 시각이 1건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성폭력 보도의 바람직한 변화 가운데 하나로 최근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적 분위가 언론에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성주의 시각은 한겨레(25.0%)가 동아일보(18.0%)에서 보다 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 개인의 의식변화와 법·제도의 강화에 초점 둔 성폭력 보도 : 미시적 접근

상당수의 성폭력 기사는 미시적인 대안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시적 차원의 변화(예, 개인

〈표 6〉 피해자 유형의 특성

단위 : 건수 (%)

유형	동아일보	한겨레	계
미성년자(아동, 10대)	30 (49.2)	37 (61.7)	67 (55.4)
성인 여성	31 (50.8)	22 (36.7)	53 (43.8)
장애인	—	1 (1.7)	1 (0.8)
외국인	—	—	—
계	61 (50.4)	60 (49.6)	121 (100.0)

〈표 7〉 보도시각

단위 : 건수 (%)

시각	동아일보	한겨레	계
보수주의	—	—	—
여성주의	11 (18.0)	15 (25.0)	26 (21.5)
시각부재	50 (82.0)	45 (75.0)	95 (78.5)
계	61 (100.0)	60 (100.0)	121 (100.0)

〈표 8〉 성폭력 해결방안

단위 : 건수 (%)

해결방안	계
개인의 의식변화	3 (1.1)
법·제도 강화	10 (38.4)
성교육 보강	5 (19.2)
성문화(이데올로기) 변혁	8 (30.7)
계	26 (100.0)

의 의식변화, 성교육의 보강)를 제시한 기사가 전체의 69.2%(18건)나 되었다. 성폭력은 구조적인 요소와 개인적인 요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라는 입장에서 볼 때, 개인적인 요소의 변화만으로는 성폭력을 예방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향후 성폭력 보도는 보다 구조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에 입각한 장기적인 대안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2. 심층인터뷰 결과 : 성폭력 보도 특성의 문제점과 원인

가. 보수적인 성문화

응답자들은 성폭력 관련 보도는 기자들의 여성차별의식 즉, 보수적인 성의식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이러한 보수적인 성의식은 ‘피해자 비난법(victim blaming approach)’에 익숙한 성역할 고정관념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여전히 성문제를 공론화하지 않으려는 의식이 팽배한 것 같아요.” (#6, 여)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보는 편견이 심해요.” (#15, 남)

이들에 의하면,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여성인권을 무시하거나 여성을 배려하지 않는 보도관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한다. 즉, 가해자 중심으로 접근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보도방식은 뿌리 깊은 여성차별의식, 여성의 인권경시 풍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이들은 최근 성폭력 보도는 여성차별의식의 산물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인권을 운운하면서 가해자를 너무 보호하는 것 같아요.” (#1, 남)

“피해자와 가족의 인권이나 2차 피해에는 무심한 보도 관행이

그대로 있어요.” (#10, 여)

“피해자의 인권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것 같아요.” (#13, 여)

“인권이 존중되지 않고 약자를 가해하는 잘못된 의식이 팽배해요. 특히 일선기자들과 언론인들의 인권의식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16, 여)

응답자들은 성폭력 보도가 향후에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피해자 특히 아동피해자의 경우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의 보도가 강력하게 요구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사진보도에서 가해자가 현장범이 아닌 이상 범인으로 판명되기 전에는 얼굴사진 보도에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인권문제를 낳습니다.” (#16, 여)

“피해자의 인권을 경시하는 현상은 반드시 없어야 할 것입니다.” (#17, 남)

“인권경시현상은 인권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없어서 생긴 것이므로 인권보호를 위한 보도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18, 여)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성폭력 관련 보도는 언론인의 의식개혁, 즉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는 의식, 양성평등의식의 배양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나. 기자의 전문성 결여

응답자들은 성폭력 보도의 특성으로 심층성 결여를 강조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이러한 심층성 결여는 기자들이 성폭력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해서 비롯된다고 한다. 성폭력 보도의 제작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자의 전문성 결여에 대한 이들의 지적은 다음과 같다.

“전문가적 시야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방산의 일각으로 드러난 부분에만 관심을 쓰고 수면 아래 숨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3, 남)

“기자의 보도 접근 방식이 분석적이지 않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하나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보는 각도 - 예를 들면 교육적, 사회적, 심리적 - 에 따라서 다른데 오직 한 각도에서만 보는 것 같다. 그 이유는 기자가 이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서다. 이는 확실성을 낳는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7, 남)

“한국 성폭력 보도의 문제점은 무엇보다 담당기자의 훈련과 경력이 부족하며 전문기자의 부재가 낳은 것이다.” (#10, 여)

“무엇보다 보도의 전문성이 없기 때문이다. 전문교육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기자의 성폭력 사건보도는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자나 언론사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14, 남)

“성폭력 관련 보도의 전문성은 정말 부족하다. 이러한 전문성 부족이 사건사고의 현상만을 소개하는데 그치게 한다.” (#15, 남)

응답자들은 기자들의 전문성 결여가 성폭력 관련 보도의 확실성, 즉 피상적 접근을 낳는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응답자들은 성폭력 관련 보도의 개선책으로 기자의 전문성 확보를 시급한 과제로 지적하였다.

“기자들은 우선 차분하고 냉정해야 한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나름의 전문성과 거시적 시야를 가져야 한다.” (#3, 남)

“성폭력 관련 보도는 전문성이 미흡하여 피상적인 상태로 일관되고 있다. 이는 언론사 자체 내에서의 예산 투자 등이 소홀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언론의 환경감시기능과 사회통합기능들을 고려한다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인명살상으로 이어지는 성폭력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 분야의 전문기자나 관련분야 전문가 위원회 운영을 통한 언론사의 기능강화와 시각 설정이 필요하다...” (#11, 남)

“성폭력 관련 보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만 하다.” (#11, 남)

성폭력 관련 보도의 피상성이라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자의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는 체계적인 훈련과 재교육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그 대안으로 성폭력 전문기자제의 도입 및 활용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언론사간 과당경쟁 : 시청률과 구독률에 얽매인 상업주의

응답자들은 성폭력 관련 보도가 시청률이나 구독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선정적인 표제, 사진, 내용을 담아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속성은 이윤추구의 극대화를 꾀하는 상업주의의 필연적인 산물이라는 것이다.

“언론사들이 난립하면서 인터넷 매체는 클릭수, 신문과 방송은 구독률이나 시청률을 올리는데 급급한 상황에 있다. 이는 경쟁 과열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2, 남)

“성폭력 관련 보도에는 상업주의가 깊이 침투해 있다. 지나친 취재 경쟁과 한건주의 탓이다. 이는 사회가 말초적 쾌락을 추구하는 성향과도 관련이 있다. 한건주의나 상업주의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3, 남)

“성폭력 관련 보도의 특성은 선정적이고 자극적이며 흥미를 유발하는데 있다. 또 후속 취재 위주의 경마식 반복 보도의 특성도 보인다. 이는 시청률과 구독률에 얽매인 상업주의, 타 언론사에 낙종하지 않으려는 지나친 경쟁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8, 남)

또한, 응답자들은 성폭력 보도가 언론사간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보도방식으로 흐르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최근의 성폭력 보도는 매우 자극적이고 선동적이다.” (#12, 남)
 “피해자의 성폭력 상황을 거침없고 매우 적나라하게 보도함으로써 모방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13, 여)

“언론은 속성상 시청률 구독률 때문에 기본을 지키지 않는 과열보도, 선정보도로 이르는 경향이 있다. 이는 피해자가 여성이고 또 ‘성’문제와 관련이 되다 보니까 성폭력 보도에서 더 과열보도, 선정보도 성향이 나타나는 것 같다.” (#6, 여)

“사안에 관계없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슈 위주의 보도가 줄을 잇고 있으며 사건 발생 위주의 기사로 흐른다. 이것은 매체의 발달로 많아진 기사들이 깊이보다는 보다 빨리 보도해야 한다는 과열 경쟁에서 비롯된 것 같다.” (#4, 여)

“평이한 단어를 쓸 수 있음에도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단어 위주로 부각시켜 보도한다. 매체간 경쟁으로 문제예방책을 제시하는 보도보다는 사고 위주의 보도가 많다.” (#4, 여)

“신문의 경우 독자의 정서를 자극하는 지면 구성과 스토리 전개, 방송의 경우 피해자의 절규 등으로 시선을 사로잡으려는 편집이 선정성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언론의 상업화와 시청률 경쟁 등이 낳는 병폐 중의 하나이다.” (#11, 남)

이러한 언론사의 과당경쟁은 ‘냄비 저널리즘’을 동반한다.

“냄비 저널리즘은 쉽게 말해 언론보도의 획일성 문제와 상통한다. 자극적인 제목 위주의 기사로 독자들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기사를 우르르 일제히 보도하는 경향을 말한다.” (#4, 여)

“언론기관의 지나친 속보 경쟁은 냄비저널리즘을 낳는다.” (#10, 여성)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진중하게 고민하지 않고 사회 이슈만 쫓아가려는 관념 때문인 것 같다.” (#13, 여)

응답자들은 언론사간 무한경쟁과 과당경쟁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성폭력 보도의 가이드라인 제작 및 활용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경쟁적 보도에 매몰되지 않기 위한 자성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한다.” (#5, 남)

“심층적인 독배기 저널리즘이 필요하다. 성범죄를 어떤 방식으로 저질렀다는 세부적인 범죄내용을 지양하고 여론형성 기관으로서 성폭력 범죄에 대해 단순하고 냉정하게 보도하는 입장이 필요하다.” (#2, 남)

“사건 발생 직후의 보도 성향은 마녀사냥식인 경우도 있다.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하는 저널리즘이 요구된다.” (#15, 남)

라. 열악한 보도제작 환경과 기자의 보도윤리의식 부재

응답자들은 성폭력 기사가 열악한 보도제작 환경에서, 그리고 기자들의 보도윤리 및 철학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였다.

“취재 시간 비용 등의 여건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단 기본만 확인하고 보도하는 취재관행이 문제이다.” (#2, 남)

“아직 보도 윤리가 제대로 서 있지 않고 데드라인에 쫓긴다. 이러한 성향은 국민성과도 관계가 있는데, 언론인들은 문제의식에 기초한 진실 접근보다는 뺑뚱기 혹은 튀려는 성향을 강하게 보유한 것 같다.” (#3, 남)

“기자 개인들도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접근의식이 매우 부족한 것 같다.” (#5, 남)

“언론인은 공정성에 기반을 둔 철저한 취재기법을 익혀야 할 것이다.” (#7, 남)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16, 여)

응답자들은 성폭력 보도의 개선을 위한 전제 조건의 하나로 언론사의 재정적 지원을 꼽았다. 이들에 의하면, 언론사의 재정적 지원이 있을 때 언론인의 의식변화는 물론이고 보도제작 환경의 개선이 가능하다고 한다.

“언론사는 기자들이 심층취재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3, 남)

또한, 이들은 기자들이 경쟁적 보도에 매몰되지 않기 위한 대안으로 성폭력 관련 보도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바람직한 성범죄 관련 보도 가이드라인 구축이 시급하다.” (#20, 여)

“언론사는 성폭력 관련 보도가이드라인을 확보하고, 정부도 이를 감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7, 남).

“언론사는 성폭력 보도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하는데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10, 여)

“성폭력 보도의 바람직한 방향은 언론중재위원회, 인권위원회 등 제3의 기구에서 성폭력 보도 매뉴얼을 준수하는 언론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16, 여)

“기자협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피해자 인권을 중시하는 보도가 될 수 있는 관련 법령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17, 남)

응답자들은 정부를 비롯한 유관단체, 시민단체 등은 지속적으로 언론사의 성폭력 보도의 내용을 분석하고 감시하는 한편, 차등적 지원과 규제를 적용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만 향후 성폭력 보도가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하였다.

V. 결론

본 연구는 성폭력 관련 보도의 특성을 규명하고 문제점 및 그것의 원인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성폭력 보도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신문기사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하였고, 그것의 원인을 밝히고자 언론인의 심층인터뷰를 시도하였다.

가. 성폭력 관련 보도의 특성

1) 상당수 성폭력 관련 보도는 스트레이트기사 유형에 속하였다(62.0%). 향후 언론은 성폭력과 관련한 주제를 보도하는데 있어서 현황 보고나 소개에 그치는 단순한 정보제공자에서 벗어나 사회적 비판자, 감시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2) 상당수 성폭력 관련 보도는 주로 기자가 취재하여 제작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80.2%). 전문가(관련 외부 전문가 9.1%, 논설위원 5%)에 의한 심층보도는 15% 미만에 불과하였다. 향후 언론은 사내·외 전문가를 더 기용하여 성폭력 관련 주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3) 상당수 성폭력 관련 보도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표면적인 현상을 다루는데 그치고 있다(약 78%). 향후 성폭력 보도는 성폭력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고, 원인을 규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비판적인 시각에서 제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4) 상당수 성폭력 관련 보도는 단순히 사실을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62.0%). 향후 성폭력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기사가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5) 절반 이상의 성폭력 관련 보도는 미성년자(아동, 10대)와 관련된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것이었다(55.4%). 반면 장애인 여성이나 외국인 여성과 관련된 성폭력 사건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언론은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폭력 이슈에 집중하였던 것이다. 이는 소재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향후 언론은 다양한 계층과 관련된 성폭력 이슈를 발굴하여서 보도소재의 다양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6) 대다수 성폭력 관련 보도는 시각을 담아내지 못했다(78.5%). 즉 수박 겉 핥기식 보도가 주를 이루었다. 향후 성폭력 보도는 이슈의 현황 진단을 넘어서서 원인 분석, 대안 제시 등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시각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7) 상당수 성폭력 관련 보도는 미시적인 차원의 대안을 강조하였다(69.2%). 다시 말해, 이들이 제시한 대안은 기껏해야 개인의 의식 변화, 법·제도의 강화, 성교육의 보강 등이 전부였다. 향후 성폭력 관련보도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성폭력 보도의 문제점과 그 원인

1) 보수적인 성문화 : 성폭력 관련 보도는 기자들의 여성차별의식, 즉 보수적인 성의식의 산물이다. 특히 이러한 보수적인 성의식은 ‘피해자 비난법(victim blaming approach)’에 익숙한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여성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할 필요가 있다. 향후 언론인은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는 의식, 양성평등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며, 피해자(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책임감을 지녀야 할 것이다.

2) 전문성 결여 : 성폭력 관련 보도의 심층성 부재는 기자들의 전문적 지식 및 관점의 부족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기자들의 전문성 부족이 성폭력 보도의 획일적 접근, 즉 피상적 접근을 낳는다. 이러한 틀에서 보면, 성폭력 관련 보도의 개선은 기자의 전문성의 확보와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기자들의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는 체계적인 훈련 및 재교육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성폭력 전문 기자제도 도입도 하나의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언론사간 과당경쟁 : 언론사간 과당경쟁은 성폭력 관련 언론보도의 선정성과 상업성을 낳는다. 이러한 언론사의 과당경쟁은 ‘냄비 저널리즘’을 동반하기도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언론사간 무한경쟁과 과당경쟁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성폭력 보도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열악한 제작환경과 기자의 윤리의식 부재 : 성폭력 관련 보도의 문제점은 열악한 보도제작 환경과 기자들의 보도윤리 및 철학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 성폭력 관련 보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언론인의 의식 변화는 물론 언론사의 재정적 지원을 통한 보도제작 환경의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나아가 언론사는 기자가 경쟁적 보도에 매몰되지 않도록 성폭력 관련 보도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덕모 (2006). 성폭력 보도와 인격권. 『언론중재』, 여름호, 96~103.
- 김선남 · 장해순 (2011). 성폭력 관련 한국 신문보도의 특성에 관한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22호, 5~36.
- 김선남 · 최용준 · 이영원 (2007). 『지역문화와 지역신문』. 한국언론재단.
- 김선남 (1996). 사회문제가 아닌 개인적 성윤리로 규정-성폭력 관련 보도. 『신문과 방송』, 36~40.
- 김예란 (2003). 『경성뉴스와 연성뉴스, 그 효용의 실제』. 서울: 미디어연구소.
- 김훈순 (2004). 한국 언론의 젠더프레임-범지 뉴스와 여성. 『한국언론정보학보』, 35호,

- 63~91.
- 문경란 (1994). 성폭력과 언론보도. 세계 성폭력 추방기간 기념 심포지엄 발제논문, 36~43.
 - 박명진 (1991). 『한국 TV탐사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TV 사회고발 프로그램』, 서울: 한국언론재단.
 - 이승선 (2012). 섬세하고 엄밀한 취재 없다면 차라리 보도하지 말아야. 『신문과 방송』, 28~32.
 - 이진국 (2004). 모방범죄와 폭력적 충동 유발할 수도. 『신문과 방송』, 9~53.
 - 유선영 (1999). 성범죄보도가 구성하는 여성신화, 김명희·정기현 (편). 『대중매체와 성의 정치학』, 서울: 나남, 95~143.
 - 장하경주 (2006). 불안감만 부추기는 성폭력 보도. 『신문과 방송』, 125~129.
 - 정용국 (2012). 성범죄를 ‘이야깃거리’로 취급하는 언론, 시나브로 신뢰 잃는다. 『신문과 방송』, 24~27.
 - 조수선 (2003). 『다매체 환경과 뉴스 수용자의 미래: 신문과 인터넷 뉴스를 중심으로』, 서울: 미디어연구소.
 - 하종대 (1999). 한국 언론의 성범죄 보도-문제점과 개선방향, 21세기 여성미디어네트워크, 제3차 월례논단 발제논문.
 - 황용석 (1999). 직장인의 경제기사 수용행태분석. 『IMF와 경제기사』, 서울: 한국언론재단.
 - McQuail, D (1987). Mass Communication Theory -An Introduction(2nd.ed). 오진환 역 (1990). 『매스커뮤니케이션이론』, 서울: 나남.
 - 경향신문, 2009. 10. 2.
 - 동아일보, 2010. 4. 17.
 - 기자협회보, 2012. 9. 19.
 - 한겨레, 2012. 8. 17.
 - <http://www.sisters.or.kr/index.php/subpage/pds/1>
 - 경향신문, 2009. 10. 2.
 - 동아일보, 2010. 4. 17.
 - 기자협회보, 2012. 9. 19.
 - 뉴시스, 2012. 10. 17.